

보도시점 2024. 4. 2.(화) 16:00

배포 2024. 4. 2.(화) 13:00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 최상목 부총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특례 신설시 타당성 심사 제도 도입
-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수립,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2.(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❶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추진 계획, ❷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 ❸ '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❹ '24년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이 이제는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기술혁신·공급망 안정·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 공공조달규모(조원): ('18)141.3 → ('23)208.6 / 조달참가업체(만개): ('18)40.1 → ('23)57.2

우선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하겠다고 하였다.

* ❶최적·적시 조달 및 재정효율성(목표), ❷경쟁·개방·공정·투명 절차(절차), ❸정책적 기능·활용(역할)

다음으로, 조달특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❶조달특례 성과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하면서, ❷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하였다. ❸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조달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년 주기 정기평가를 실시

이와 함께 「'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23년) 조달청,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 ⇒ ('24년) 조달청^{530억원}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4-215-5230)
		담당자	사무관	이성민 (sm718@korea.kr)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실 신성장판로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봉규 (042-724-6151)
		담당자	사무관	도미영 (sky97@korea.kr)

- 지금부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의 현황과 정책운용방향]

-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57만 개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였던 조달은
 - 이제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 실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PP)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 * Strategic Public Procurement(SPP): 규모상 GDP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17.7월 OECD)
-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안전} 공공조달법(가칭) 추진 계획]

- 우선,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가칭)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 ①최적·적시 조달 및 재정효율성^(목표), ②경쟁·개방·공정·투명 절차^(절차), ③정책적 기능·활용^(역할)

-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또한,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안전² 주요 조달특례 개선방안]

□ 다음으로는, 그간 기술개발 촉진과
중소기업·여성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해 온
조달특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첫째,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에 대해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둘째,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기존의 조달특례 중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 간 중복부분을 해소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3} '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 마지막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그간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금년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하여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 ('23년) 조달청,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해수부 ⇒ ('24년) 조달청^{530억원}
- 이를 기반으로 ①신성장·신산업 육성, ②공공서비스 개선, ③해외실증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 앞으로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모든 지자체, 공공기관도 그 동안의 전통적인 조달 관행을 답습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공공조달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